재능계발서 우유 급식까지…올 97개 사업 4250억 투입

전남 미래 인재 육성 손 잡은 전남도-도교육청 협력비전 공동 발표

가용자원 총동원 코로나 방역 총력
3000여명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노후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시·군별 창의센터 설립 인재 양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조기 극복과 전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의 미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인구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이 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역 출신 인재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고, 이들이 비용 걱정없이 실력에 맞는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전남도는 올해만 4250억원의 예산을 인재 양성에 배정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코로나19 총력대응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비전'을 공동발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공동발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과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검사부터 추적, 치료까지 이어진 K-방역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함께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인재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분야 97개 사업에 총사업비 4250억원이 지원될 '2021년 교육지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로 선발된 '으뜸인재'들에게 최장 10년 동안 매년 최대 500만원의 재능계발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모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시범운영, 대안 교육시설 무상급식 지원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진로체험 강화를 위해 21억원을 투입, 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찾아가는 4차 산업혁명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갖고 대동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교육과 이순신 리더십 캠프 등 지역사회 기반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역을 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전남형 미래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마다 미래형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시·군별 창의융합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으뜸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에서 삶을 설계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향후 5년간 220여 동의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육성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도시 학생들이 전남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화훼농가 등 농어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소비 권장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 도교육감도 "전남의 미래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을 갖고 꿈을 키워 장차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력해 전남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교육은 10년 후, 100년 후에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변함없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대표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도 포함돼야"

서삼석 의원안 정부에 건의…조율 중
한전공대·여순특별법 3월 국회 처리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에 이를 건의했고 막판 조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광주일보와 만나 농어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이 건의한 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주목된다.

서 의원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배제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농수축산림인 250만 명, 가구수로는 113만 8000가구가 대상이다. 또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60세 이상의 농수축산림인 가구, 경지 면적 2ha 미만의 소농, 화훼·채소·과수농가와 체험농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전공대법과 여순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와 시간 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만큼 진전된 부분도 있다"며 "3월 임시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며 (3월 대표직 사퇴) 이전에 당내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통합,광역경제권 구상 등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대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적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광역철도망과 배후 산업단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시대와 그 이후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에 대해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를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정했다.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고 시대정신이며 그 해법을 저의 신복지 제도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 달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지율 반등 전략에 대해서는 "지지율 하락 부분은 정치의 어려움과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준 아픈 지점"이라며 "특별한 지지율 반등 전략보다는 제가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총리 "방역 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26일 백신 접종 시작 차분히 준비"
홍익표 "4차 지원금 20조원 안팎"

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선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며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히 준비하고 필요하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 상황을 소개하며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문화단체, 아특법 처리 국민의힘 협조 촉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0여개 시민문화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원내대표가 미합의 법안이라는 이유로 2월 임시국회로 넘겨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며 "국민의힘 몽니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문화전당은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월 보궐 선거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 후속 정치 일정으로 인해 사실상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물건너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문화단체는 "국민의힘 호남동행 활동이 쇼가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몽니가 계속되면 민주당은 주저하지 말고 단독으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가 "아특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 발언이 성난 지역의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